미래엔 교과서

평가 문제집

고등학교 통합사회2

바른답·알찬풀이

Mirae N 에듀

Ⅰ 인권 보장과 헌법

01~02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 현대 사회의 인권 9~12쪽

개념 다지기 **01** 인권 **02** (1) ㉣ (2) ㉡ (3) ㉢ (4) ㉠
03 (1) × (2) ○ **04** (1) ㄴ (2) ㄱ (3) ㄷ

실력 올리기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②
06 ④ **07** ④ **08** ③ **09** ① **10** ② **11** ②
12 ①

01 (가)는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강조한다.

02 근대 시민 혁명 중 (가)는 영국의 명예혁명, (나)는 미국의 독립 혁명, (다)는 프랑스 혁명이다. 시민 혁명의 결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성별, 재산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바로 잡기 ① 영국의 명예혁명은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② (나), (다) 모두 국민 주권을 강조하였다.
③ 근대 시민 혁명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④ 시기적으로 (가) → (나) → (다) 순으로 일어났다.

03 제시된 문서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는 자유권, 평등권, 국민 주권, 저항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바로 잡기 ④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인 사회권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04 (가)는 차티스트 운동이다.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으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잡기 ㄴ. 차티스트 운동은 시민 혁명 이후에 벌어진 운동이다.

05 (가)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고, (나)는 세계 인권 선언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인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바로 잡기 ①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강조한다.
③ 세계 인권 선언은 3세대 인권을 강조한다.
④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에 제정되었고,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에 발표되었다.

06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천부 인권 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시민 혁명을 통해 참정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자와 여성 등은 참정권 획득을 위해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을 일으켰다. 이들의 노력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정권을 보장받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바로 잡기 ㄴ. 세계 인권 선언은 두 차례 세계 대전 이후 1948년에 발표되었다.

07 특정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여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권리를 연대권이라고 한다. 1948년 국제 연합(UN) 총회에서는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인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 협약 등 보편적인 인권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 왔다.

바로 잡기 ㄴ. 인권의 내용과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의 결과 인권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08 1세대 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등이 해당하고, 2세대 인권에는 사회권이 해당한다. 3세대 인권인 연대권에는 자결권,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이 해당한다.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권이다.

09 (가)는 1세대 인권, (나)는 2세대 인권, (다)는 3세대 인권이다. 2세대 인권은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며, 3세대 인권은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이다.

10 현대 사회에서는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등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바로 잡기 갑. 자유권과 평등권은 1세대 인권으로서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강조되었다.
병.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11 (가)는 주거권, (나)는 환경권, (다)는 문화권이다. 환경권은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임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바로 잡기 ③ 산업 안전 보장법은 안전권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다.
④ 주거 기본법은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다.
⑤ 주거권, 환경권, 문화권은 사회권 중심의 2세대 인권에 해당한다.

12 건물이 붕괴하여 시민이 다친 것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따라서 (가)는 안전권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을 통해 안전권을 보장하고 있다.

바로 잡기 ㄷ. 문화권에 관한 설명이다.
ㄹ. 주거권에 관한 설명이다.

03~04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

14~17쪽

개념 다지기 **01** 헌법 **02** (1) ㉡ (2) ㉠ (3) ㉢ **03** (1) ○ (2) ○ **04** (1) ㄷ (2) ㄱ (3) ㄴ

실력 올리기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④ **10** ④ **11** ④ **12** ③

01 헌법 제10조에서 강조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을 수단적 가치가 아닌 목적적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 된다.

02 (가)는 자유권, (나)는 평등권, (다)는 사회권이다.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보장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다.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03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사회권, 청구권이며,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가)는 청구권, (나)는 사회권, (다)는 자유권이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바로 잡기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③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는 자유권이다.
④ 청원권은 청구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⑤ 사회권, 청구권은 자유권과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04 제시된 헌법 조항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권력 분립 제도를 나타낸다. 권력 분립 제도는 국가 권력 기관의 상호 독립성을 강조하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바로 잡기 ㄴ. 국민 주권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ㄷ.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05 국회 의원, 대통령은 모두 민주적 선거 제도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민주적 선거 제도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한다. 국민 투표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바로 잡기 ㄷ.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06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바로 잡기 ①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② 위헌·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③ 국정 조사권은 입법부가 행정부 등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⑤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07 A는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 법률이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한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에 해당한다.

08 (가)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그 구제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이다.

09 시민이 주권 의식을 가지고 정치 과정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시민 참여라고 한다. 시민 참여는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잡기 ④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

10 시민이 참여 의식을 가지고 정치 과정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시민 참여라고 한다. 시민 참여 방법 중 선거는 대표자를 통해 시민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을 통한 참여는 집단적 참여에 해당하며, 언론 매체를 통한 의견 표출은 개인적 참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갑, 정이고,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익 집단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 활동과 달리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참여 활동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고, 주민 조례 청구는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 방법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11 (가)는 시민불복종이다. 시민불복종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국민의 행위이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 가능하며, 간접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바로 잡기 ㄷ. 시민불복종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를 기꺼이 감수하므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행위는 아니다.

12 시민불복종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한 여러 합법적인 방식이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시행되어야 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법을 존중해야 한다.

05~06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19~21쪽

개념 다지기 **01** 사회적 소수자 **02** (1) ㉡ (2) ㉢ (3) ㉠
03 (1) ○ (2) ○ **04** (1) ㄷ (2) ㄱ (3) ㄴ

실력 올리기 **01** ⑤ **02** ① **03** ⑤ **04** ③ **05** ④
06 ⑤ **07** ② **08** ④

01 (가)는 사회적 소수자이다.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고, 주류 집단보다 권력의 열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노인, 이주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이 해당한다.

바로 잡기 ㄱ.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에 비해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인 것은 아니다.

02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바로 잡기 ㄷ.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지 역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03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을 작성해야 한다.

바로 잡기 ㉤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문화 상품권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04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 연령은 15세 이상부터이다. 13~14세 청소년이 일하려면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이 근로할 때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이 포함된 근로 계약서를 청소년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05 세계 기아 지수는 세계 빈곤 문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가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세계시민 의식을 고취하여 세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로 잡기 ㄴ. 선진국에서도 일부 기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06 사례는 A국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권 지수로는 국제 아동 권리 지표가 있다.

07 세계 인권 문제로 빈곤, 여성·아동 인권 침해, 난민 문제, 인종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의 결핍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아동 인권은 아동이 부모나 사회, 국가의 적절한 보호와 배려 등을 받으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이다.

바로 잡기 을. 유리 천장 지수는 성차별 관련 지수이다.
정. 세계 인권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08 성차별은 남녀 간 임금 격차, 고용 및 승진, 교육 수준이나 정치 참여 기회 등에서 나타난다.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기구의 인권 보장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 비정부 기구 등이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바로 잡기 ㄴ. 공적 개발 원조(ODA)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 차원의 지원이다.

Ⅱ 사회 정의와 불평등

01~02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25~27쪽

개념 다지기 **01** 정의 **02** (1) ㉡ (2) ㉢ (3) ㉠
03 (1) × (2) ○ **04** (1) 교정적 (2) 응보 (3) 예방

실력 올리기 **01** ⑤ **02** ② **03** ② **04** ④ **05** ⑤
06 ⑤ **07** ① **08** ①

01 학생의 노트 필기 주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분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정의는 공익을 지향하는 준법으로서의 정의이다.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뉜다. 분배적 정의는 가치와 업적에 비례하여 명예나 보수 등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정적 정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보상해 주고,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02 ㉠에 들어갈 용어는 '정의'이다. 정의는 인간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정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정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바로 잡기 ㄴ, ㄹ.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의 궁극적 목적은 법이나 제도의 효율성 증진이 아니라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03 ㉠에 들어갈 용어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중 하나인 '업적'이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능력에 따른 분배처럼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바로 잡기 ①, ③, ④, ⑤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각자가 달성한 결과를 객관화·수량화할 수 있어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쉽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이룬 업적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려는 성취동기가 높아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업적을 쌓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04 (가)는 업적에 따른 분배가 적용된 사례이며, (나)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적용된 사례이다.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정의롭다고 본다. 업적과 필요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해당한다.

05 갑은 능력에 따른 분배를, 을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한다. 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분배된다. 따라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을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잡기 ①, ②, ④ 을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나 실적만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③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과 을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06 ㉠은 분배적 정의, ㉡은 교정적 정의이다. 분배적 정의는 한정된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필요하다. 교정적 정의는 잘못에 관한 대응이 공정한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의 법 집행에 따른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실현된다.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바로 잡기 ㄱ. 분배적 정의는 각자가 자신의 마땅한 몫을 받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몫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07 제시문은 처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응보주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여 범죄와 처벌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바로 잡기 ② 응보주의는 범죄와 처벌 간의 균형을 강조하므로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다.
③ 응보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④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예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예방주의의 입장이다.
⑤ 범죄자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예방주의의 입장이다.

08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교정적 정의에 있어 응보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이며,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예방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처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는 베카리아이다. 칸트와 같은 응보주의 입장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다.

03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30~33쪽

개념 다지기 01 자유주의 02 (1) ㉡ (2) ㉠ (3) ㉠
03 (1) ○ (2) × 04 (1) 공동체주의 (2) 원초적 입장 (3) 노직

실력 올리기 01 ① 02 ④ 03 ④ 04 ① 05 ④
06 ② 07 ① 08 ⑤ 09 ⑤ 10 ② 11 ②
12 ② 13 ③ 14 ④

01 제시문이 강조하는 사상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개인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바로 잡기 ②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좋은 삶을 희생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③ 개인을 연고적 자아로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이다.
④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와 독립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02 제시문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관한 내용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개인은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바로 잡기 ㄱ.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정의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연관 지어 바라본다.
ㄷ.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이 공동체의 전통이나 가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03 제시문의 사상가는 자유 지상주의자인 노직이다. 노직은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로 무엇을 할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으며,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직은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등 제한적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①, ②, ③, 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04 제시문의 사상가는 노직이다.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소유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고,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제한적 역할만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하였다. 이러한 노직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잡기 ②, ③, ④, ⑤ 노직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05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보았으며,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① 자유 지상주의 사상가는 노직이다.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② 롤스는 어떤 직책이나 직위에 오를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롤스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롤스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06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의 주제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특정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적 유대감과 배려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매킨타이어와 샌델이 있다.

바로 잡기 ㉡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이다.

07 ㉠에 들어갈 개념은 '공동체주의'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특정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이익인 공익(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바로 잡기 ①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이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인 사익(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08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매킨타이어와 샌델이 있다. 매킨타이어는 서사적 자아를 강조하면서 개인은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샌델은 연고적 자아를 강조하면서 개인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09 제시문의 (가)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관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공동선을 증진

할 수 있으므로 시민은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로 잡기 ㄱ.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이다.
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정의롭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이다.

10 제시문의 사상가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지닌 매킨타이어이다. 매킨타이어는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첫 번째 입장.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와 독립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세 번째 입장.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11 제시문의 사상가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지닌 샌델이다. 샌델은 연고적 자아를 강조하면서 개인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샌델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②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이다.

12 ㉠에 들어갈 용어는 '초과 이윤세'이다. 자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세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잡기 ① 자유 지상주의에서는 초과 이윤세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⑤ 자유 지상주의에서는 초과 이윤세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④ 초과 이윤세가 공동체에 관한 구성원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이다.

13 제시문은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관한 사례이다.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공동체의 유산뿐만 아니라 빚이나 의무 역시 물려받는다. 따라서 과거 세대의 잘못이라도 현세대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고 공동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즉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현세대의 책임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잡기 ㄱ, ㄹ.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과거 세대의 잘못에 관한 책임이 현세대의 선택이나 동의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고 본다.

14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에서는 부유세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의롭지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바로 잡기 ①, ②, ⑤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에서는 부유세가 정의롭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 부유세가 공동선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행해야 할 의무이자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평가이다.
③ 자유 지상주의적 정의관에서는 부유세가 부유한 사람들의 개인선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04~05 다양한 불평등 현상 ~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35~37쪽

개념 다지기 **01** 사회 불평등 **02** (1) ○ (2) ×
03 (1) ㉢ (2) ㉡ (3) ㉠
04 (1) 사회 보험 (2) 사회 서비스 (3) 공공 부조

실력 올리기 **01** ⑤ **02** ③ **03** ③ **04** ② **05** ④
06 ② **07** ⑤ **08** ②

01 제시된 자료와 관련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계층의 양극화이다. 사회 계층의 양극화는 주로 재산과 소득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격차의 심화로 인해 발생한다. 경제적 격차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바로 잡기 ㄱ. 국가에 의한 복지 정책은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ㄴ. 사회 계층의 양극화는 부가 상위층에 집중되고 하위층 비율이 늘어나며 중위층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상위층과 하위층의 자산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02 학생의 노트 필기 주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원인에는 선입견 및 편견과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 환경 등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약자가 사회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비합리적인 까닭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회 구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잡기 ㉢ 공간 불평등 현상의 원인이다.

03 제시문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주 노동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원인에는 선입견 및 편견과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 환경 등이 있다.

바로 잡기 ㄱ. 제시된 사례는 이주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보여 준다. 이는 성별에 따른 소득 격차와는 무관한 문제이다.

ㄷ.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불평등 현상은 능력과 실적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04 제시문은 지역 간 의료 격차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공간 불평등 현상과 관련이 있다. 공간 불평등 현상은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간 불평등 현상은 과거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추진된 성장 거점 정책 때문에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성장 가능성이 큰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여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였지만, 그 외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공간 불평등은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 환경의 전반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05 제시된 자료를 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 불평등 현상을 유추할 수 있다. 공간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려면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바로 잡기 ㄷ.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은 공간 불평등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06 ㉠은 사회 보험, ㉡은 사회 서비스, ㉢은 공공 부조이다. 사회 보험은 개인, 정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돌봄,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공 부조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전액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07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사회 보험은 민간 보험과 달리 법률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공공 부조는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 복지 제도이다.

바로 잡기 ① 사회 보험은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사업이다.

② 사회 보험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개인, 기업,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한다.

③ 공공 부조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④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이다.

08 제시문은 여성 할당제에 관한 설명이다. 여성 할당제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사례이다. 여성 할당제는 정치, 공직, 기업의 고위직 등에 여성의 진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바로 잡기 ㄴ. 여성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유리 천장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ㄹ. 여성 할당제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 불평등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Ⅲ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01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경제 41~43쪽

개념 다지기 **01** 자본주의 **02** (1) ㉡ (2) ㉢ (3) ㉣ (4) ㉠
03 (1) × (2) × (3) ○ **04** (1) 유통, 생산 (2)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실력 올리기 **01** ④ **02** ① **03** ③ **04** ③ **05** ④
06 ⑤ **07** ③ **08** ⑤

01 A는 시장경제 체제, B는 계획경제 체제이다.

바로 잡기 ④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 가격,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 체제이다.

02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사적 이익 추구 활동이 보장되는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 체제이다. 따라서 '경제 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를 보장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잡기 ②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는 계획경제 체제이다.
③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하는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 체제이다.
④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 모두에서 자원의 희소성에 의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⑤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보장되는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 체제이다.

03 (가)는 산업 자본주의, (나)는 수정 자본주의, (다)는 신자유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바로 잡기 ① 상업 자본주의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의 이윤 추구를 강조하였고, 산업 자본주의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의 이윤 추구를 강조하였다.
②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④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모두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한다.
⑤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 복지 예산 축소에 찬성한다.

04 갑의 주장은 수정 자본주의 학자인 케인스의 주장이며, 을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학자인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한 하이에크는 공기업 민영화, 복지 정책의 축소 등에 찬성하였다.

바로 잡기 ① 갑은 큰 정부를 지향할 것을 주장한다.
② 국가의 부를 증대하기 위해 상업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은 중상주의 정책으로 이는 상업 자본주의와 관련 있다.
④, ⑤ 갑과 을은 모두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05 수정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A는 수정 자본주의, B는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와 달리 공기업의 민영화를 찬성한다. 따라서 (가)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찬성하는가?'가 들어가면, ㉠은 '아니요', ㉡은 '예'이다.

바로 잡기 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②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의 대응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의 대응으로 등장하였다.
③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인정한다.
⑤ 수정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에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가?'가 들어가면, ㉠은 '예', ㉡은 '아니요'이다.

06 (가)는 수정 자본주의, (나)는 산업 자본주의이다. 역사적으로 산업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보다 등장 시기가 이르다.

바로 잡기 ① 수정 자본주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② 산업 자본주의는 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③ 산업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는 모두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한다.
④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07 제시문은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될 때 사회 전체의 이익도 커진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바로 잡기 ① 상업 자본주의는 중상주의 정책을 통한 국부 증진을 추구하였다.
②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④ 애덤 스미스는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⑤ 수정 자본주의에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08 갑의 주장은 애덤 스미스, 을의 주장은 케인스의 주장과 관련 있다. 을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사회 보장 제도·공공사업의 확대 정책을 찬성할 것이다.

바로 잡기 ①, ②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 갑은 작은 정부, 을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④ 갑과 을은 모두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

02~03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45~47쪽

개념 다지기 **01** 합리적 선택 **02** (1) ㉡, ㉢ (2) ㉠, ㉣
03 (1) ○ (2) × (3) ○ (4) × (5) ○
04 (1) 기업가 정신 (2) 윤리적 소비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력 올리기 **01** ③ **02** ③ **03** ② **04** ② **05** ⑤
06 ② **07** ② **08** ②

01 갑이 공연 관람을 선택할 경우 기회비용은 공연 관람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관람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20만 원의 명시적 비용과 공연 관람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하루 임금인 10만 원의 암묵적 비용을 더한 30만 원이다.

바로 잡기 ㄱ. ㉠은 공연 관람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다.
ㄹ. 갑이 공연 관람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 관람 선택의 편익이 기회비용인 30만 원보다 커야 한다.

02 갑이 A~C를 선택할 때의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및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원)

구분	A	B	C
편익	9	10	12
명시적 비용	7	6	9
암묵적 비용	4	3	4
기회비용	11	9	13
순편익	-2	1	-1

①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4만 원(=10만 원-6만 원)이다. ② B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B의 가격인 6만 원이다. ④ A 선택의 기회비용은 11만 원(=명시적 비용 7만 원+암묵적 비용 4만 원)으로 C 선택의 기회비용인 13만 원(=명시적 비용 9만 원+암묵적 비용 4만 원)보다 작다. ⑤ ㉠이 10으로 변동하더라도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4만 원이므로 A 선택의 기회비용은 변함이 없다.

바로 잡기 ③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03 갑이 떡볶이와 김밥을 선택할 때의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및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떡볶이	김밥
편익	9,000	㉠
명시적 비용	5,000	4,500
암묵적 비용	㉠-4,500	4,000
기회비용	㉠+500	8,500
순편익	8,500-㉠	㉠-8,500

ㄱ. 김밥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4,000원(=떡볶이 선택의 편익 9,000원-떡볶이 가격 5,000원)이다. ㄹ. ㉠이 '9,000'일 경우 김밥 선택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므로 김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바로 잡기 ㄴ. 떡볶이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4,500)원이다.
ㄷ. ㉠이 '7,000'일 경우 떡볶이 선택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므로 떡볶이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04 등대, 국방, 치안 등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인 공공재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비할 수 있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여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05 담합은 생산품이 비슷한 회사끼리 생산량, 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다. 독과점 시장에서 기업은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06 (가)는 긍정적 외부 효과, (나)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되며,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된다. 이는 모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

바로 잡기 ㄴ.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
ㄹ.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혜택 등의 긍정적 유인을 통해,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세금 징수 등의 부정적 유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07 A는 공공재, B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기업은 이윤을 얻기 어려우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

지 못하는 과소 생산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잡기 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은 공공재의 비배제성을 의미한다.

③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 등의 긍정적 유인 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과징금 부과나 세금 징수 등의 부정적 유인 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④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⑤ 공공재와 부정적 외부 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08 ㉠은 윤리적 신념이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원료 재배, 생산, 유통 등의 전 과정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명과 인권, 동물, 환경, 공동체를 배려하는 소비이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나 빈곤 퇴치 등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04~05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 ~국제 분업과 무역 50~53쪽

개념 다지기 **01** (1) ㉡ (2) ㉠ (3) ㉢

02 (1) ㉠, ㉢ (2) ㉡, ㉢ (3) ㉠, ㉢ (4) ㉠ **03** 비교 우위

04 (1) 절대 우위, 수출, 수입 (2) 비교 우위, 수입, 수출

실력 올리기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②

06 ⑤ **07** ② **08** ① **09** ④ **10** ⑤ **11** ⑤

12 ⑤

01 (가)는 주식, (나)는 예금이다. 예금은 주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다.

02 주식과 채권은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시세 차익은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예금과 채권은 모두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예금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채권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03 A는 주식, B는 채권이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잡기 ① 주식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② 채권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④ 주식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채권은 만기가 존재한다.

04 A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고, B는 수익성이 높다. 따라서 A는 예금, B는 주식이다. 예금은 채권보다 수익성이 낮지만 안전성이 높고, 주식은 채권보다 수익성이 높지만 안전성이 낮다.

바로 잡기 ① 예금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은 주식이다.

②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금융 자산은 주식이다.

③ 주식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주식의 발행 기관은 주식회사이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이 발행하는 금융 자산은 채권이다.

05 정기 예금은 주식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발생하면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받는 금융 자산이다.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은 30%이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은 정기 예금과 채권으로 이들의 비중은 각각 50%와 10%이다.

바로 잡기 ② 주식과 채권은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06 조정 전과 후의 비중 변화가 없는 C는 정기 예금이고, 금융 자산의 비중이 높아진 B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다. 따라서 A는 채권이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정기 예금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은 채권과 주식으로, 조정 후 이들의 비중은 75%로 조정 전과 같다.

바로 잡기 ㄱ. A는 채권, B는 주식, C는 정기 예금이다.

ㄴ. 채권은 주식에 비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07 나라마다 특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이 다른 까닭은 생산 요소의 지역적 분포 차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품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잡기 ㄴ. 필요한 재화를 모두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우므로 국제 분업과 무역이 필요하다.

ㄹ.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08 (가)는 비교 우위, (나)는 절대 우위이다. 각 나라가 보유한 기술 수준, 노동력, 자본 등의 차이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보다 모든 상품의 생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일지라도 비교 우위를 통해 국제 무역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잡기 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품이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ㄷ.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는 모두 국제 무역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09 갑과 을의 물고기 1마리와 열매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물고기 1마리 생산의 기회비용	열매 8/5개	열매 3/4개
열매 1개 생산의 기회비용	물고기 5/8마리	물고기 4/3마리

① 갑은 물고기 1마리를 잡기 위해 열매 8/5개를 포기해야 한다. ② 갑은 을보다 물고기 잡기와 열대 따기에서 생산량이 많으므로 갑이 물고기 잡기와 열매 따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③ 갑은 열매 따기에, 을은 물고기 잡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⑤ 물고기 1마리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이 열매 8/5개, 을이 열매 3/4개로, 갑이 을보다 크다.

바로 잡기 ④ 을은 열매 1개를 따기를 위해 물고기 4/3마리를 포기해야 한다.

10 X재 1단위 생산을 위해 갑국은 Y재 2단위를, 을국은 Y재 3/4단위를 포기해야 하므로 을국이 X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Y재 1단위 생산을 위해 갑국은 X재 1/2단위를, 을국은 X재 4/3단위를 포기해야 하므로 갑국이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바로 잡기 ①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② 갑국은 을국보다 X재와 Y재 모두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갑국은 X재와 Y재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③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Y재 3/4단위로, 갑국의 Y재 2단위보다 작다.

④ 갑국의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단위이다.

11 갑국과 을국의 X재,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과 생산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Y재 1/3단위	Y재 2단위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X재 3단위	X재 1/2단위
X재 1단위의 생산비	20달러	120달러
Y재 1단위의 생산비	60달러	60달러

① X재 1단위의 생산비는 갑국이 20달러, 을국이 120달러이므로 갑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②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으므로 을국이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③ X재 1단위의 생산비는 을국이 120달러로 갑국 20달러의 6배이다. ④ 을국은 X재 1단위의 생산비가 120달러로 Y재 1단위의 생산비인 60달러보다 많다.

바로 잡기 ⑤ 교역 전 X재와 Y재를 각각 1단위 생산 및 소비하기 위해 갑국은 80달러, 을국은 180달러가 필요하다.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하여 1 : 1로 교역한다면, 갑국은 X재 2단위, 을국은 Y재 2단위를 생산하여 교역하므로 갑국은 40달러, 을국은 120달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환 비율이 1 : 1이면 갑국은 40달러, 을국은 60달러의 무역 이익이 발생하므로 갑국과 을국은 모두 교역에 참여한다.

12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 목적은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Ⅳ 세계화와 평화

01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 57~59쪽

개념 다지기 **01** (1) × (2) ○ (3) ○ **02** 장소 마케팅
03 (1) ㄱ (2) ㄷ (3) ㄴ
04 (1) 공간적 분업 (2) 초국적 기업 **05** ㉠ 보편적, ㉡ 세계시민

실력 올리기 **01** ① **02** ④ **03** ④ **04** ② **05** ⑤
06 ② **07** ⑤ **08** ④

01 ㉠은 세계화 현상이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이러한 세계화의 배경이 된다. 세계화로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였다. ㉡은 지역화 현상이며, 지역화 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에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접목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세계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바로 잡기 ① 지역 브랜드는 지역화 전략 중 하나이다.

02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의 개최는 지역의 장소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는 연평균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적 특색을 활용하여 눈 축제를 기획하였는데, 이 축제가 성공을 거두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바로 잡기 ㄹ.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축제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지역화와 세계화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03 (가)는 지리적 표시제, (나)는 지역 브랜드에 관한 설명이다.

04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자본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국제 협력과 분업의 확대, 생산의 국제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을 통해 세계 도시가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잡기 을.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이후 무역 장벽은 낮아졌다.
정.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세계 도시가 등장하였다.

05 세계 도시는 회계·법률·광고 등 전문화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전 세계의 자본과 정보가 집중한다.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 2위인 뉴욕에는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인 월스트리트가 있으며, 이곳의 상황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바로 잡기 ㄱ. 런던은 뉴욕보다 교통 점수가 낮지만 순위가 높다.
ㄴ. 국제 연합(UN)의 본부는 2위 세계 도시인 뉴욕에 위치한다.

06 세계화로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였다. 다국적 기업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적 분업을 하고 있다.

바로 잡기 ②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은 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보다 많기도 하다.

07 다국적 기업의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은 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개발 도상국에 설립하거나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에 세우기도 한다.

바로 잡기 ①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초국적 기업은 본사 또는 본사의 핵심 기능까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다.
② 미국, 독일은 선진국에 해당한다.
③ 경영 기획 및 관리는 본사가 담당한다. 연구소는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④ ㉣은 ㉡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낮다.

08 세계화로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지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하기도 한다. 또한 세계화는 자유·평등·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02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61~63쪽

개념 다지기 **01** 보편 윤리 **02** (1) ○ (2) × (3) ○
03 (1) ㉡ (2) ㉠
04 (1) 문화 다양성 (2) 유네스코 (3) 보편적 가치

실력 올리기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①
06 ④ **07** ② **08** ④

01 제시문의 원인이 된 현상은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세계를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만들면서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도 발생시켰다. 세계화의 문제점에는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문제, 빈부 격차의 심화,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충과 같은 유해 물질이 여러 국가로 전파되거나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잡기 ㄱ. 국가 간 공정 무역의 확대는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이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노력에 해당한다.

02 학생의 노트 필기 주제는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문제'이다. 세계화로 문화를 상품화하고 이를 소비하는 수요자의 범위

가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을 가진 선진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전 세계 문화가 선진국 문화를 중심으로 비슷해지는 문화 획일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선진국 문화가 보편화하면서 약소국이나 원주민, 소수 민족 등의 고유한 문화가 선진국의 문화에 밀려 점차 사라질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03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빈부 격차의 심화이다. 빈부 격차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하여 세계화의 성과가 일부 선진국이나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잡기 ㄹ. 세계화의 성과가 일부 선진국과 기업에만 제공되면 빈부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04 제시문은 세계화의 문제점 중에서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 갈등에 관한 내용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한다. 보편 윤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윤리를 말한다. 반면 특수 윤리는 특정한 집단 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특정 시대나 문화,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윤리를 말한다.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 사례에는 이슬람 관습법(특수 윤리)과 인권(보편 윤리)의 충돌을 들 수 있다.

바로 잡기 ⑤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가 충돌할 때는 보편 윤리의 존중과 함께 특수 윤리를 성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5 제시문은 세계화로 인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현상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화 이전에 나왔다면 처음 발생한 몇몇 국가만 피해를 보고 끝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잡기 ②, ③, ⑤ 제시문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다.
④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니다.

06 제시문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중 일부이다. 문화 다양성 선언은 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선언으로,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07 제시된 대화의 교사와 학생은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 윤리의 존중과 함께 특수 윤리를 성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 윤리의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특수 윤리를 인정하되 인간존엄성이나 자유, 평등 등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바로 잡기 을. 선진국의 문화만을 따르게 되면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병. 자기 문화의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 공정 무역은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국가 간 빈부 격차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08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소시켜 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여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롤스는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질서 정연하다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원조의 목적으로 하는 싱어와 대비된다.

바로 잡기 ① 싱어는 원조의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② 싱어는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원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⑤ 싱어와 롤스는 모두 원조를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다.

03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 65~67쪽

개념 다지기 **01** 소극적 평화 **02** (1) × (2) ○
03 (1) ㉢ (2) ㉡ (3) ㉠
04 (1) 정부 간 국제기구 (2) 국제 비정부 기구 (3) 국가

실력 올리기 **01** ② **02** ④ **03** ⑤ **04** ① **05** ③
06 ① **07** ② **08** ④

01 ㉠은 소극적 평화, ㉡은 적극적 평화이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려면 전쟁, 테러, 범죄 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직접적 폭력이 없더라도 빈곤이나 차별 등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각종 억압과 차별 및 불평등 등과 같은 간접적인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바로 잡기 ㄴ.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도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극적 평화이다.
ㄹ.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은 소극적 평화보다 적극적 평화가 더 강조한다.

02 학생의 노트 필기 주제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이다.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려면 전쟁, 테러, 범죄 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각종 억압과 차별 및 불평등 등과 같이 한 사회의 구조나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바로 잡기 ㉣ 빈곤, 기아, 각종 억압과 차별 및 불평등은 직접적 폭력이 아니라 간접적 폭력이다.

03 제시문은 국제 사회에서 분쟁 등으로 평화가 실현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 준다. 국제 사회에서 평화가 실현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로 잡기 ㄷ. 제시된 사례를 통해 평화 실현의 중요성과 부의 균등한 분배의 관련성은 유추할 수 없다.

04 ㉠에 들어갈 용어는 '국가'이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국가는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공식적으로 활동하며,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국가는 양보와 타협을 통한 외교적 협상을 하는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평화 실현에 이바지한다.

바로 잡기 두 번째 설명. 각 국가의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네 번째 설명. 국제 비정부 기구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05 제시문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환경 보호, 인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국제 비정부 기구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국제 사면 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은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지구촌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잡기 ③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구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06 국제 비정부 기구는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지구촌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나 테러에 따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로 잡기 ②, ③, ④, ⑤ 국제 비정부 기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07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갈퉁이다. 갈퉁은 전쟁·분쟁 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규정한 기존의 평화론을 비판하고, 착취·차별 등의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평화의 개념을 인간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로 확대하였다.

바로 잡기 ② 갈퉁은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 즉 직접적 폭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하였다.

08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가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이지만 실행 가능한 도덕적 명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칸트는 국가 간에 도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전쟁 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ㄱ.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 체제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세계시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04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 69~71쪽

개념 다지기 **01** 동북공정 **02** (1) ○ (2) × **03** (1) ㉡ (2) ㉠ (3) ㉢ **04** (1) 신탁 통치 (2) 독도 (3) 평화 유지군

실력 올리기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5** ① **06** ④ **07** ④ **08** ⑤

01 제시문은 남북 분단의 배경 중 국제적 배경에 관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남북 분단의 국제적 배경으로는 미소 간 냉전 대결의 심화를 들 수 있다.

바로 잡기 ①, ②, ④ 남북 분단의 국내적 배경이다.
⑤ 남북한은 1948년에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었다.

02 ㉠에 들어갈 용어는 '동북공정'이다.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고대 중국의 지방사(史)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였다. 중국은 지금도 발해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소수 민족을 통합하여 이들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바로 잡기 네 번째 설명. 태평양 전쟁이 아시아 국가들의 번영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03 ㉠에 들어갈 용어는 '야스쿠니 신사'이다.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적으로 참배함으로써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영웅으로 추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일본과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갈등을 겪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바로 잡기 ㄱ.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4 학생의 노트 필기 주제는 '남북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이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북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잡기 ㉣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도 필요하다.

05 제시문은 아시안 하이웨이에 관한 내용이다. 통일을 통해 아시안 하이웨이가 연결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불러올 수 있고, 국제 사회의 경제적 번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바로 잡기 ㄷ, ㄹ. 제시문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06 제시문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 준다. 독일처럼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평화적 교류와 협력은 서로 간의 이해를 높여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남북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바로 잡기 ④ 제시문을 통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7 제시된 대화의 교사와 학생들은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려면 공동 역사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우리의 역사 연구 성과를 국제 학계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바로 잡기 을, 병의 대답과 같은 방법은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08 제시문은 우리나라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사례로는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기, 대량 살상 무기와 테러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여러 국가와 협력하기,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기, 빈곤, 기아, 재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등이 있다.

바로 잡기 ⑤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은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V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01 세계의 인구 현황 75~77쪽

개념 다지기 **01** (1) 인문 (2) 아시아 (3) 산업 혁명 (4) 인구 구조
02 (1) × (2) ○ (3) × (4) ○ **03** (1) ㉣ (2) ㉢ (3) ㉡ (4) ㉠
04 ㄴ, ㄹ

실력 올리기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②
06 ③ **07** ⑤ **08** ④

01 세계의 인구 분포는 기후와 지형 등 자연환경과 산업과 교통 등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건조 기후 지역,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하다.

바로 잡기 ㄴ. 오늘날에는 산업과 교통 등 인문환경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ㄷ. 중위도 냉·온대 기후 지역은 인구가 밀집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와 고원은 인구가 희박하다.

02 동부·동남·남부 아시아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구 부양력이 높은 벼를 재배하여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바로 잡기 을. 벼농사와 같은 1차 산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므로 인구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 기존 대답은 기대 수명에 관한 설명이다. 인구 부양력이란 어떤 지역에서 주어진 자원을 이용하여 얼마만큼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03 세계의 인구 분포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남반구보다 북반구에 밀집해 있다. A는 사하라 사막 지역으로 인구가 희박하다. C는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공업이 발달하여 인구가 집중한다.

바로 잡기 ④ 시베리아(B)는 한랭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으로 인문환경보다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구가 희박하다.

04 대륙별 인구 비율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래프의 (가)는 아시아, (나)는 아프리카, (다)는 유럽이다.

05 (가)의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고 노년층 비율이 낮아 니제르에 해당하며, (나)는 유소년층 비율이 낮고 노년층 비율이 높아 독일에 해당한다. 독일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노년층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잡기 ① 니제르는 1차 산업 중심의 사회로 출생률이 높다.
③ 니제르는 독일보다 중위 연령이 낮다.
④ 독일은 니제르보다 유소년층의 비율이 낮다.

06 1단계는 질병, 자연재해, 식량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2단계에서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증가한다. 3단계에 들어서면 가족계획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증가율도 이전보다 낮아진다. 4단계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져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기이다. 5단계에서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도 한다.

07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었고, 개인의 이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이동은 주로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 기회가 풍부한 선진국을 향해 개발 도상국 인구가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적 요인에 따른 인구 이동은 전쟁이나 분쟁으로 인한 난민 발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로 잡기 ㄱ. 교통 발달로 인해 세계화 이전보다 개인의 이동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단축되었다.

08 (가)의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 개발 도상국에서 이주해 왔다. 이들은 가사 노동을 담당함으로써 싱가포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나)의 인구가 유입된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인구가 유출된 지역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송금을 통해 외화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가)와 (나)는 모두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이동에 해당한다.

02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 79~81쪽

개념 다지기 **01** (1) ㉡ (2) ㉡ **02** (1) ○ (2) × (3) ×
03 (1) 인구 부양비 (2) 초고령 사회 (3) 생산 가능 인구
04 (1) ㉡, ㉣ (2) ㉠, ㉢ **05** 세대 간 정의

실력 올리기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②
06 ① **07** ① **08** ①

01 세계 인구는 오랜 시간 천천히 증가하다가, 산업 혁명 이후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ㄴ. 1900~1950년보다 1950~2000년에 세계 인구 성장이 뚜렷하다. ㄷ. 선진국이 많은 북아메리카는 2020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정체 혹은 감소 상태이다.

바로 잡기 ㄱ. 1950년 이후 세계의 인구 성장은 개발 도상국이 주도하고 있다.
ㄹ. 2060년 아프리카의 인구는 20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02 인구 과잉 상태에서는 식량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기아와 빈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촌락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과밀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주택과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도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바로 잡기 ③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문제이다.

03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과 식량 증산으로 인구 부양력을 높이고,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를 둔화하기 위한 출산 억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도시 육성과 촌락의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바로 잡기 갑.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병.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04 (가)는 총인구가 증가하고 총 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니제르이다. (나)는 총인구가 2020년 이후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독일이다. 독일(나)의 총인구는 미래(2040~2100년)에 대한 예측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에 독일(나)은 니제르(가)보다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더 클 것이다.

바로 잡기 ㄱ. (가) 국가는 노년 부양비보다 유소년 부양비의 비중이 더 높다.
ㄹ. (가)는 니제르, (나)는 독일이다.

05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매력이 높은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잡기 ㄴ. ㉠은 합계 출산율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ㄹ. 저출생·고령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지만, 현재는 일부 개발 도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06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제시된 모든 국가는 2050년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해당할 것이다.

바로 잡기 ① 독일은 2021년 이미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07 제시된 글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서울에서 나타난 변화를 보여 준다.

바로 잡기 ①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억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일본과 독일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3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 84~87쪽

개념 다지기 **01** ㉠ 기술적 의미의 자원, ㉡ 경제적 의미의 자원
02 (1) ㄴ (2) ㄱ (3) ㄷ **03** (1) × (2) ○ (3) ○ (4) ○
04 (1) 자원 민족주의 (2) 지구 온난화

실력 올리기 **01** ③ **02** ④ **03** ① **04** ② **05** ②
06 ① **07** ② **08** ⑤ **09** ③ **10** ④ **11** ③
12 ④ **13** ⑤ **14** ③

01 자원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인간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것이다.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정한 시점에는 고갈되는 특성이 있다.

바로 잡기 ㄱ.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생산비가 많이 드는 등 경제성이 낮아 실제로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경제적 의미의 자원보다 범위가 더 넓다.
ㄹ. 자원은 기술적 수준·경제적 조건·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02 (가)는 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편재성의 사례이며, (나)는 자원이 기술적 수준·경제적 조건·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가변성의 사례에 해당한다.

03 에너지 자원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연료로 이용되며, 광물 자원과 함께 현대 산업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차 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등 변화나 가공을 거치기 이전의 천연자원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이다.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변화·변형·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로, 전기나 도시가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04 세계의 인구 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석탄>천연가스의 순으로 많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의 소비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잡기 ②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수력과 원자력의 비중보다 크다.

05 (가)는 아시아·오세아니아와 유럽에 2/3 이상 매장되어 있는 석탄, (나)는 서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 2/3 정도 매장되어 있는 석유, (다)는 서남아시아와 유럽에 2/3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이다.

06 그래프는 석탄의 주요 생산·소비·수출·수입국을 나타낸 것이다. 석탄은 화석 에너지 중 가장 먼저 상용화되어 산업 혁명 시기에 증기 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바로 잡기 ② 석탄은 석유와 천연가스보다 국제 이동량이 적다.
③, ④ 천연가스에 관한 설명이다.
⑤ 석유에 관한 설명이다.

07 (가) 자원은 주요 생산지가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 등이며, 사우디아라비아·미국·러시아 등에서 생산량이 많은 석유이다. 석유는 신생대 지층의 배사 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로 잡기 ㄴ은 석탄, ㄹ은 천연가스에 관한 설명이다.

08 주요 화석 에너지의 대륙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가 80% 정도를 차지하는 (가)는 석탄이고, 서남아시아가 35% 정도를 차지하는 (나)는 석유이며, 서남아시아·북아메리카·유럽에서 생산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는 천연가스이다. 천연가스는 석유가 매장된 지역에서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잡기 ①과 ②는 석유(나), ③은 석탄(가)에 관한 설명이다.
④ 천연가스(다)는 연소될 때 석탄과 석유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09 (1) 서남아시아는 화석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다. (2) 인구가 많고 공업이 발달한 동부 아시아는 화석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다. (3) 지역별 화석 에너지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로 자원의 국제 이동이 발생한다. (4) 화석 에너지 자원은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바로 잡기 (1)은 '예', (4)는 '아니요'에 표시해야 한다.

10 그래프는 국가별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적은 양의 원료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이 있다.

바로 잡기 ㄱ.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석탄과 석유 등을 태우는 화력 발전이다.
ㄷ.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보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으며, 온실가스 배출도 매우 적다.

11 제시된 지도는 자원의 확보와 이동을 둘러싼 분쟁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12 ④ 자원 민족주의는 자원 소비국이 아니라 자원 생산국이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원을 무기화하는 주장이나 행동이다.

13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지도를 살펴보면,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4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 산업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의미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분야를 정하는 분류 체계이다.

04~05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 미래 사회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의 방향 90~93쪽

개념 다지기 **01** (1) 기후변화 (2) 지속가능한 발전 (3) 파리 협정
02 (1) ㄷ (2) ㄴ (3) ㄱ **03** (1) ○ (2) × (3) ○
04 ㉠ 세계시민 의식, ㉡ 미래

실력 올리기 **01** ③ **02** ① **03** ④ **04** ④ **05** ①
06 ① **07** ④ **08** ① **09** ②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③ **15** ①

01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빙하의 감소를 초래하고,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며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

0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는 국가와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바로 잡기 ㄷ.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과 개인적 노력이 중요하다.
ㄹ.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0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으로는 국제 연합(UN)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공적 개발 원조(ODA) 등이 있다.

04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인구 통계, 경제 발전, 복지 등 사회·경제 변화를 함께 고려하며, 환경·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잡기 ㄱ, ㄷ.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지표 온도 상승 폭이 1~4℃까지 큰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05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06 공정 무역 제품 이용하기(ㄱ)는 윤리적 소비(가)에,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ㄴ)는 자원 절약(나)에, 취약 계층이나 빈곤국 주민 후원하기(ㄷ)는 사회적 연대 의식(다) 고취에 해당한다.

07 신·재생 에너지는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친 개념으로, 고갈 우려가 낮고 오염 물질 및 이산화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적·기술적 여건과 자연 조건 등에 따라 국가별 발전량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잡기 ④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보다 효율이 떨어져 경제성이 낮은 편이다.

08 (가)는 수력 발전, (나)는 풍력 발전, (다)는 태양광(열) 발전에 해당한다.

09 (가) 수력 발전은 빙하 지형과 산지가 발달한 지역, 유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나) 풍력 발전은 바람이 강한 해안이나 섬 또는 고원 지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다) 태양광(열) 발전은 비가 적게 내리고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바로 잡기 ㄴ. 태양광(열) 발전에 관한 설명이다.
ㄷ. 태양광(열) 발전은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10 전문가 합의법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델파이 기법이라고도 한다. 시나리오 기법은 일반적으로 3~4개 정도 복수의 미래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예측한 미래 모습은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로 나뉜다.

바로 잡기 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합의법, 시나리오 기법과 같은 미래 예측 기법이 등장하였다.

11 지역 무역 협정은 인접국 혹은 일정 경제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 통합이다. 자유 무역 협정, 관세 동맹, 공동 시장, 완전 경제 통합 등이 있다. 유럽 연합(EU)은 지역 무역 협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로 잡기 ㄴ. 지역 무역 협정의 체결로 무역 장벽이 낮아져 이전보다 자유 무역은 확대될 것이다.

1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이퍼루프, 자율 주행 자동차, 도심 항공 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공간적 제약이 극복되고, 인류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13 (가) 영화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루며, 복제 인간과 같은 유전 공학 기술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나) 영화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 잡기 ① (가)의 복제 인간은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가)는 미래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④ (나)는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⑤ (가)에 관한 내용이다.

14 우리는 생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유전 공학과 수직 농장 등을 활용하여 식량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멸종 위기 생물종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바로 잡기 ③은 생태환경의 변화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과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15 세계시민으로서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개방적 태도와 관용적인 자세를 지녀야 하며,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의 흥미와 적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Ⅰ 단원 학교 시험 대비하기 97~100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④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② **10** ④ **11** ② **12** ④

13 (1) A - 자유권, B - 평등권, C - 사회권 (2) 예시 답안 A -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B -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 금지 등, C -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14 (1) (가) 국회 (나) 정부 (다) 법원 (2) 예시 답안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면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 권력을 나누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15 (1) ㉠ 법치주의, ㉡ 시민불복종 (2) 예시 답안 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16 (1) 빈곤 문제 (2) 예시 답안 (가)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국제기구의 노력이나 각 국가가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01 A는 권리 장전, B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권리 장전은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물이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발표되었다. 모두 시민 혁명의 결과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잡기 ㄱ. A, B는 모두 절대 왕정을 부정한다.
ㄴ. A, B는 모두 사회권과 관련이 없다.

02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종·종교·성별·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지는 권리이다.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영구히 보장되는 항구성을 갖는다. 갑, 을, 병은 옳은 내용을 발표했으므로 (가)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바로 잡기 ㄱ. ㉠은 정이다.
ㄷ. (가)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03 인권은 자유와 평등, 참정권을 강조하는 1세대 인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을 강조하는 2세대 인권,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3세대 인권으로 확장되어 왔다. 사회권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바로 잡기 ① (나)에서 여성과 노동자 모두 참정권 확대 운동을 벌였다.
③ (라)에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가)에서 강조된 인권은 (라)에서도 인정된다.
⑤ 차티스트 운동은 (나) 시기에 일어났다.

04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는 안전권이므로 A는 안전권이며, B, C는 각각 문화권, 환경권 중 하나이다. ㄱ.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는 산업 안전 보건법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이 있다. 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경을 누릴 권리는 환경권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문화권이다. ㄷ.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는 문화권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문화권이며, 문화 예술 진흥법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바로 잡기 ㄹ. 환경 정책 기본법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C가 환경권이면 B는 문화권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문화권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5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C는 사회권이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는 청구권이므로 A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B는 자유권이다. ㄱ. 청원권은 청구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ㄴ. 청구권과 사회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ㄹ.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바로 잡기 ㄷ. 자유권은 청구권과 달리 소극적 권리이다.

06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평등권이므로 A는 참정권, B는 평등권이다.

바로 잡기 ④ 평등권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07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판해 줄 것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사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잡기 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민은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ㄷ.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강조된 권리는 사회권이다.

08 입법부인 국회는 국정 감사를 통해 국방부, 즉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사법부인 대법원은 위헌·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09 시민이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참여 의식을 갖고 정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다.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만 시행되어야 한다. 시민불복종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법을 존중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민불복종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0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문화적 특징에 따라 주류 집단에 의해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주류 집단보다 권력의 열세에 있으나 반드시 수적으로 열세인 것은 아니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잡기 ㄱ. 을의 총점은 1점이므로 ㉠이 '예'라면 마지막 질문의 답이 틀려야 한다. 따라서 ㉣은 '예'이다.

11 한국의 성 불평등 지수는 상위권이지만 성 격차 지수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두 지수는 모두 성평등 정도를 나타내지만 한국의 순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은 각 지수마다 어떤 지표를 반영하여 측정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 관리직·전문직 비율이 늘어나면 성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성 격차 지수와 여성 관리직·전문직 비율은 정(+)의 관계에 있다.

바로 잡기 ㄴ. 여성 의원 비율이 증가하면 성 불평등 정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성 불평등 지수는 낮아질 것이다.
ㄹ. 유사 업무에서의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면 성 격차 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1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연소 근로자로 근로 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보호한다. 갑의 근무일이 5일이고, 임금은 최저 임금을 초과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바로 잡기 ㄴ. 현재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다. 17세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임금은 한 달에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데 1월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계약했으므로 근로 기준법 위반이다.

13

채점 기준	
상	기본권 A~C를 쓰고 A~C에 해당하는 권리의 예를 각각 두 가지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기본권 A~C를 쓰고 A~C에 해당하는 권리의 예를 각각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기본권 A~C만 정확하게 쓴 경우

14

채점 기준	
상	국가 기관 (가)~(다)를 쓰고 권력 분립 제도를 헌법에 규정한 까닭과 목적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국가 기관 (가)~(다)를 쓰고 권력 분립 제도를 헌법에 규정한 까닭과 목적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국가 기관 (가)~(다)만 정확하게 쓴 경우

15

채점 기준	
상	㉠, ㉡을 쓰고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네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 ㉡을 쓰고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 ㉡을 쓰고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16

채점 기준	
상	빈곤임을 쓰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빈곤임을 쓰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빈곤만 쓴 경우

Ⅱ 단원 학교 시험 대비하기 102~105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7 ③ **08** ③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1) ㉠ 업적, ㉡ 필요 (2) 예시 답안 업적에 따른 분배는 우연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4 (1) 예방 (2) 예시 답안 처벌의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시민들이 범죄자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 범죄자의 인간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15 (1) ㉠ 자유 지상주의,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2) 예시 답안 자유 지상주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다.

16 예시 답안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자립형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01 사회가 정의롭지 않으면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고, 재화가 불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바로 잡기 ④ 일상에서 공정한 원칙을 강조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02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인 플라톤,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인 벤담이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란 정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보았다. 벤담은 산업 사회 발달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적인 생각에서 공리주의를 발전시켰다. 플라톤과 벤담은 모두 사회가 정의로워야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ㄴ. 플라톤은 모든 시민이 계급을 넘어 모든 일에 탁월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사회의 각 계급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03 (가)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 업적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필요를 강조하는 정도'(X)와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고,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업적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04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왈처이다. 왈처는 다원성의 관점에서 정의와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는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지배(dominance)'에 주목하였고,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다른 모든 영역을 지배하여 장악하는 것은 폭정이고 '전제(tyranny)'라고 주장하였다.

바로 잡기 ①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②, ③, ④ 왈처의 입장과 무관하다.

05 (가)의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처벌의 본질을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칸트는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살인범에 대한 형벌로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을 주장하였으며,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사형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 잡기 ① 처벌의 정당한 기준으로 등가성 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칸트이다.
③ 처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베카리아이다.
④ 처벌의 목적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응보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칸트이다.
⑤ 처벌의 목적이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은 베카리아이다.

06 제시문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을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아 공동체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자유주의는 개인선과 공동선이 충돌할 경우 개인선을 더 중시하지만, 공동선과 개인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잡기 두 번째 입장. 개인이 공동체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이다.
세 번째 입장.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고 본다.

07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① 롤스는 부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② 롤스는 더 큰 기본적 자유를 위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공리의 원리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⑤ 롤스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08 (가)의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의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자 하였으며,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보았다. 노직은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가지며, 재화의 올바른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와 노직은 모두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① 롤스와 노직 모두 사유 재산권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라고 보았다.
② 롤스는 최소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재화의 분배 주체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⑤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 보호를 복지의 실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09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매킨타이어이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은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ㄱ. 매킨타이어는 인간이 공동체의 목적과 무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10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동체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이 공동체의 유산뿐만 아니라 빚이나 의무도 물려받는 존재라고 보았다.

바로 잡기 ㄴ.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고 좋은 삶을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이다.
ㄹ. 자유주의는 개인선보다 공동선을 항상 우선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11 밑줄 친 '이 제도'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상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바로 잡기 ㄱ. 업적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ㄹ.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2 제시문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하여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과거에 부당하게 차별받아 온 집단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바로 잡기 제시문의 입장에서 ㄱ.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ㄷ.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제시된 주장에 따르면 정당한 제도이다.

13

채점 기준	
상	㉠, ㉡에 들어갈 분배 기준을 쓰고, 각각의 분배 방식이 지닌 단점을 한 가지씩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 ㉡에 들어갈 분배 기준만 쓴 경우

14

채점 기준	
상	처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처벌의 목적이 ㉠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 지닌 한계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처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용어만 쓴 경우

15

채점 기준	
상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구분하여 ㉠,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각 입장의 특징을 한 가지씩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구분하여 ㉠, ㉡에 들어갈 용어만 쓴 경우

16

채점 기준	
상	공간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공간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Ⅲ단원 학교 시험 대비하기 107~110쪽

01 ② **02** ① **03** ① **04** ④ **05** ③ **06** ①
07 ⑤ **08** ④ **09** ② **10** ② **11** ③ **12** ③

13 (1) ㉠ 스태그플레이션, ㉡ 신자유주의 (2) 예시 답안 세금 감면, 복지 축소, 공기업 민영화, 기업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이 있다.

14 (1) 윤리적 소비 (2) 예시 답안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15 (1) A - 정기 예금, B - 주식 (2) 예시 답안 정기 예금은 주식과 달리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금융 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어 안전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볼 수 있고 회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예금보다 안전성이 낮습니다.

16 (1) 갑국 - 쌀 2단위, 을국 - 쌀 5/3단위 (2) 갑국 (3) 갑국은 2명의 노동력이 절감된다.

01 A는 시장경제 체제, B는 계획경제 체제이다.

바로 잡기 ①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자원 배분을 중시한다.
③ 시장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④ 시장경제 체제는 사유 재산권 보장을 중시한다.
⑤ 시장경제 체제는 경제활동에서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02 갑이 빵집 개업을 선택할 경우 빵집 운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2억 5천만 원(㉠)은 명시적 비용에 해당하고, 빵집 개업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연봉 6천만 원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빵집 개업 선택의 기회비용은 3억 1천만 원이다.

03 시장 실패의 대응으로 등장한 것은 수정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A는 수정 자본주의, B는 신자유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은 '예', ㉡은 '아니요'이다.

바로 잡기 ②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 시장 유연화를 지지한다.
③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④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수정 자본주의는 큰 정부,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4 갑이 A~C를 선택할 때의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및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A	B	C
편익	8,000	10,000	10,000
명시적 비용	6,000	7,000	9,000
암묵적 비용	3,000	2,000	3,000
기회비용	9,000	9,000	12,000
순편익	-1,000	1,000	-2,000

① A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6,000원이다. ② B 선택의 기회비용은 9,000원(=명시적 비용 7,000원+암묵적 비용 2,000원)이다. ③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C 선택의 기회비용은 12,000원으로 A 선택의 기회비용인 9,000원보다 크다.

바로 잡기 ④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3,000원으로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인 3,000원과 같다.

05 제시된 사례들은 어떠한 경제활동이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외부 효과를 보여 준다.

06 제시된 사례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인 담합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 사례를 보여 준다.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07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은 정기 예금과 채권이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은 주식과 채권이다. 갑의 경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의 비중은 70%이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의 비중은 40%이다.

바로 잡기 ① 만기가 존재하는 금융 자산은 정기 예금과 채권이다. 정기 예금과 채권의 비중은 갑이 70%, 을이 40%이다.
② 정기 예금의 비중이 높은 갑은 안전성을 중시하는 투자 성향을 보이며, 주식의 비중이 높은 을은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 성향을 보인다.
③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은 주식이다. 주식의 비중은 갑이 30%, 을이 60%이다.
④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은 주식과 채권이다. 을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70%이다.

08 A는 안전성, B는 유동성, C는 수익성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주식보다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다.

바로 잡기 ① A는 안전성, B는 유동성, C는 수익성이다.
② 채권은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③ 주식은 일반적으로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다.
⑤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금융 자산일수록 수익성이 낮다.

09 갑국은 반도체와 의류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갑국이 을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을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므로 갑국은 반도체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며, 을국은 의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잡기 ㄴ. 을국은 의류 생산에 있어 절대 열위를 가진다.
ㄹ. 의류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으므로 을국은 의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10 갑과 을의 X재,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Y재 4/5개	Y재 1개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X재 5/4개	X재 1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이 Y재 4/5개, 을이 Y재 1개이므로 갑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바로 잡기 ㄴ. 갑은 X재와 Y재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ㄹ. 갑이 1시간 동안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X재 5개 또는 Y재 4개이므로 이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다.

11 A국과 B국의 스마트폰, 의류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A국	B국
스마트폰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의류 2단위	의류 10/3단위
의류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스마트폰 1/2단위	스마트폰 3/10단위

A국의 스마트폰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2단위이다.

바로 잡기 ① 의류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스마트폰 3/10단위로, A국의 스마트폰 1/2단위보다 작다.
② A국은 B국보다 스마트폰과 의류 생산에 있어 필요한 노동자 수가 적으므로 두 상품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진다.
④ A국은 스마트폰 생산에, B국은 의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⑤ 무역 전 스마트폰 1단위와 의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A국은 6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B국은 13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하여 1:1로 교역한다면, A국은 스마트폰을 2단위 생산하고, B국은 의류 2단위를 생산하여 교역하므로 A국은 8명, B국은 6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B국은 A국과 달리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

12 저임금, 아동 노동 착취, 구조적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 무역 제품의 소비 증가, 아동의 노동 착취로 생산된 제품 소비하지 않기, 공정한 무역 관행,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를 위한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속 가능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바로 잡기 ③ 아동 노동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시민, 기업, 국가, 국제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13

채점 기준	
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세금 감면, 복지 축소, 공기업 민영화, 기업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에서 두 가지 서술한 경우
중	㉠,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세금 감면, 복지 축소, 공기업 민영화, 기업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에서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 ㉡에 들어갈 용어만 쓴 경우

14

채점 기준	
상	윤리적 소비를 쓰고 윤리적 소비가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중	윤리적 소비를 쓰고 윤리적 소비가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윤리적 소비만 쓴 경우

15

채점 기준	
상	A, B 금융 자산을 쓰고 예금자 보호 제도 적용, 투자 손실 가능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이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은 까닭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A, B 금융 자산을 쓰고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금이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A, B 금융 자산만 쓴 경우

16 갑국과 을국의 쌀, 옷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쌀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옷 1/2단위	옷 3/5단위
옷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쌀 2단위	쌀 5/3단위

갑국은 쌀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며, 을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무역 전에 쌀과 옷을 각각 1단위 생산하기 위해 갑국은 6명, 을국은 8명이 필요하다.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하여 1:1로 교역한다면, 갑국은 쌀 2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4명이 필요하고, 을국은 옷 2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10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갑국은 을국과 달리 2명의 노동력이 절감되는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

Ⅳ단원 학교 시험 대비하기 112~115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1) 공적 개발 원조 (2) 예시 답안 공적 개발 원조는 국제적 차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개발 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14 (1)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등 (2) 예시 답안 전쟁 및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5 (1) 역사 교과서 왜곡 (2) 예시 답안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우리나라와 외교 분쟁으로 이어져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

16 예시 답안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은 서로 간의 이해를 높여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01 (가)는 지역 브랜드, (나)는 지리적 표시제이다. 지역 브랜드와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지역 브랜드는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자체에 하나의 고유한 상표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인도의 다르질링 차,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 우리나라의 보성 녹차 등은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제 상품이다.

바로 잡기 ③ 축제 개최와 랜드마크 개발은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02 세계 도시는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들 도시는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가 열리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대형 금융 기관이 밀집해 있다. 또한 회계, 법률, 광고 등 전문화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바로 잡기 ② 대부분의 세계 도시들은 선진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03 지도는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기능별 입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의 A가 우리나라에 입지한 것으로 보아 A는 본사이다. B와 C 중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B는 연구소이며,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와 라틴 아메리카에도 분포하는 C는 생산 공장이다.

바로 잡기 ㄱ. 본사는 경영 기획·관리를 담당한다.
ㄹ. A는 본사, B는 연구소, C는 생산 공장이다.

04 세계화(㉠)와 지역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05 ㉠에 들어갈 개념은 '세계화'이다. 세계화로 인해 소수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할 수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해충과 같은 유해 물질이 여러 국가로 전파되거나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잡기 ㄱ.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다.

06 (가)는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문제, (나)는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이다.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1년 유네스코(UNESCO)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 선언은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사례이다.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 윤리를 인정하되 인간 존엄성이나 자유, 평등 등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바로 잡기 ④ 공적 개발 원조를 토대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07 (가)의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와 롤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에 대한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공리주의와 세계시민주의적 입장에 근거하여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① 싱어와 롤스는 모두 해외 원조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② 싱어와 롤스는 모두 해외 원조가 친소(親疏)를 기준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④ 싱어와 롤스는 모두 해외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부를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⑤ 롤스는 해외 원조가 원조 대상국의 정치 체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08 (가)는 평화로운 삶의 모습으로 물리적·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가 실현된 상태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나)는 평화로운 삶의 모습으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 상태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구조적 폭력의 제거를 강조하는 정도'(X)와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

나는 삶을 강조하는 정도'(Y), '평화의 의미를 폭넓게 규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Z)가 모두 높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09 (가)의 갑은 갈퉁, 을은 칸트이다. 갈퉁은 폭력을 살인·상해와 같은 직접적 폭력, 착취·억압과 같은 구조적 폭력, 법·교육·종교·미디어 등을 통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제 연맹에 참여하는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 체제여야 한다고 보았다.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데 정치 체제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① 갈퉁은 문화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이 관련 있다고 보았다.
② 갈퉁은 하나의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③ 갈퉁은 평화가 평화적 방법으로만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므로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은 무조건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10 제시문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중 하나인 정부 간 국제기구가 활동한 사례를 소개한다.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은 국제 사회의 테러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로 잡기 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11 제시문의 세계 식량 계획(WFP)은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세계 식량 계획은 인류의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바로 잡기 ㄷ. 세계 식량 계획은 국제 비정부 기구가 아니라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ㄹ. 일정한 영토를 가진 집단으로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12 남북 분단의 국제적 배경으로는 미소 간 냉전 대결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리나라는 광복과 동시에 남쪽은 미국, 북쪽은 구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다. 한편 남북 분단의 국내적 배경으로는 민족 내부의 응집력 부족을 들 수 있다. 광복 후 신탁 통치에 관한 찬반 논쟁과 민족 내부의 이념 갈등, 이후 발발한 6·25 전쟁은 오늘날까지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바로 잡기 ㄱ. 남한에는 자본주의,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ㄴ. 남북한이 6·25 전쟁 이후 정전 협정을 맺은 것은 1953년이다.

13

채점 기준	
상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이것이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에 들어갈 용어만 쓴 경우

14

채점 기준	
상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해당하는 예시를 두 가지 이상 쓰고,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기울이는 노력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중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해당하는 예시를 두 가지 이상 썼으나, 그들이 기울이는 노력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해당하는 예시 두 가지만 쓴 경우

15

채점 기준	
상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에 들어갈 용어만 쓴 경우

16

채점 기준	
상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이 남북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이 남북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Ⅴ 단원 학교 시험 대비하기 117~120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②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⑤ **10** ③ **11** ④ **12** ②

13 (1) (가) 경제적 이동 (나) 정치적 이동 (2) 예시 답안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청장년층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14 (1) ㉠ 고령화, ㉡ 저출생 (2) 예시 답안 가정에서는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감, 양성의 평등함을 이해하고 노년층을 삶의 지혜를 간직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등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15 (1) 석유 (2) 예시 답안 석유는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 등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높아 국제 이동량이 매우 크다.

16 (1) 세계시민 (2) 예시 답안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개방적 태도와 관용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공동체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1 지도의 A는 사하라 사막, B는 아시아 동부, C는 미국 북동부, D는 그린란드, E는 아마존 분지 일대이다. 동부·동남·남부 아시아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구 부양력이 높은 벼를 일찍부터 재배하여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바로 잡기 ① A는 기후가 건조한 사막 지역으로 인구가 희박하다.
③ 산업 혁명이 시작된 곳은 서부 유럽이다.
④ D는 한랭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으로 인구가 희박하다.
⑤ E는 열대 우림이 분포하여 인구가 희박하다.

02 (가)는 기대 수명, (나)는 중위 연령, (다)는 성비이다. 중위 연령(나)은 생활 수준이 높고 의료 기술이 발달한 곳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성비(다)가 100보다 크면 남초 현상, 100보다 작으면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잡기 ㄱ. 기대 수명(가)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대체로 짧게 나타난다.
ㄹ. 기대 수명(가)이 짧고 출생률이 높은 국가는 중위 연령(나)이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

03 대륙별 인구 순이동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 수준이 높은 앵글로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는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 2010~2020년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다)는 앵글로아메리카, 1950~1960년 인구가 유출되었지만 2010~2020년 인구가 유입된 (나)는 유럽, 2010~2020년 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가)는 아시아이다.

04 세계의 인구는 과거 오랜 기간 천천히 증가하다가 산업 혁명 이후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낮아져 급격히 증가하였다. 선진국이 많은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현재 인구 증가율이 정체 혹은 감소 상태이다. 개발 도상국이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는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구 성장이 인구 부양력의 한계를 넘어 인구 과잉 상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잡기 ② 선진국이 많은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출생률이 낮아 인구 증가율이 정체 혹은 감소 상태이다.

05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구매력이 높은 청장년층 인구의 감소는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여 의료비, 연금 등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 그 결과 청장년층이 노년층을 부양하는 부담이 가중되어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잡기 ① 일자리 부족보다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②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③ 의료비, 연금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④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06 (가)는 니제르, (나)는 독일이다. 니제르(가)는 출생률이 높아 총 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식량 및 자원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반면 독일(나)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어 총 부양비에서 노년 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노동력의 고령화로 경제 성장 둔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잡기 ㄱ. 니제르(가)는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인구 억제 및 자원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ㄹ. 독일(나)은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의 비중이 크다.

07 석탄은 주로 고기 조산대 주변에 매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탄광을 폐쇄한 이유는 석탄 채굴 비용 상승으로 경제성이 낮아졌고, 가정용 난방 연료가 석유나 천연가스 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더 깊은 갱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면 경제성이 낮아져 석탄 채굴을 중단할 수 있다.

바로 잡기 ② 화학 공업 및 생활용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석유이며, 석탄은 주로 화력 발전과 제철 공업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08 제시된 그래프의 (가)는 석유, (나)는 천연가스, (다)는 석탄이다. 천연가스는 연소될 때 석탄과 석유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바로 잡기 ① 가장 먼저 상용화된 화석 에너지는 석탄(다)이다.
② 수송용 이용 비중이 높은 화석 에너지는 석유(가)이다.
③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화석 에너지는 천연가스(나)이다.
④ 석유(가)는 석탄(다)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09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는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원 상태로 공급되는 1차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들 에너지의 사용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 메테인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미래 사회는 더 큰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수력, 풍력, 태양광(열), 지열 등)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잡기 ⑤ 화석 에너지의 대안으로 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화석 에너지보다 효율이 떨어져 경제성이 낮은 편이다.

10 (가)는 풍력, (나)는 지열의 국가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풍력(가)은 바람이 강한 해안이나 섬 또는 고원 지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중국, 미국, 독일, 브라질 등에서 발전량 비율이 높다. 지열(나)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등에서 발전량 비율이 높다.

바로 잡기 ①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다.
② 유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발전하기에 유리한 에너지는 수력이다.
④ 풍력(가)에 관한 설명이다.
⑤ (가)는 풍력, (나)는 지열이다.

11 ㉠은 지속가능 발전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국가가 각종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시한다.

바로 잡기 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환경·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ㄷ.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된다.

12 을.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역 갈등이 발생하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에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정.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후가 한랭하여 경작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에서 농경이 가능해지고 북극 항로의 이용이 활발해질 수 있다.

13

채점 기준	
상	경제적 이동과 정치적 이동을 쓰고, 인구 이동의 결과로 인구 유입 지역과 인구 유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경제적 이동과 정치적 이동을 쓰고, 인구 유입 지역 또는 인구 유출 지역 중 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만 서술한 경우
하	경제적 이동과 정치적 이동만 쓴 경우

14

채점 기준	
상	고령화와 저출생을 쓰고,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가치관 변화 측면에서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고령화와 저출생을 쓰고,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정책적 측면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고령화와 저출생만 쓴 경우

15

채점 기준	
상	석유라고 쓰고, 석유 자원의 분포와 이동 특성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석유라고 쓰고, 석유 자원의 분포와 이동 특성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석유만 쓴 경우

16

채점 기준	
상	세계시민이라 쓰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미래 삶의 방향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중	세계시민이라 쓰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미래 삶의 방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세계시민만 쓴 경우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

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 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 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 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 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 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 위원·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 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 회의

제88조 ①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 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국민 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 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 명령·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 총장·합동 참모 의장·각 군 참모 총장·국립 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원로 자문 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 원로 자문 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 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둔다.
②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 경제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 경제 자문 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 각부

제94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 위원의 자격·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 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 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 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 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 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국민 투표 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 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 자치

제117조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 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 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 개정

제128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메모